

땀 올린 추경호號... “물가안정 최우선, 비상경제 TF 가동”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내외적 경제상황 선제 대응 차원 민간중심 경제운용, 규제완화 강조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 만전 기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와 고환율 등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팀을 이끌게 된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비상경제대응 TF 설치는 최근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란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TF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뉴시스

적 대응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비상경제대응 TF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차관보(부팀장),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국고국장, 대외경제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세총괄심의관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날 1차 TF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점검했다. 아울러 치솟고 있는 물가 대응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2%대 저성장에 대비, 시장과 민간 중심의 경제 운용, 규제 완화 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리면서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격차 해소, 탄소중립 대응 등에도 정책 강도와 속도를 더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며 “전방위적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에 대비하는 노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유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국가채무 구조조정, 연금 개혁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채무, 연금 개혁 등 우리가 마주한 난제들은 진솔한 사회적 담론화 없이는 돌파할 수 없다”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하고 균형 잡힌 토론 속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 앞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33조원 넘는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 3가지 방향”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차 추경에 소요될 재원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적자재정이 우려되는 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손실보상 불만 의식했다... 당정, ‘600만원+α’ 지원 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 대상 공약 파기 논란 일면서 사태 수습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33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11일 합의했다. 총 규모 50조원 가운데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액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류성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성

일종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정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 협의에서는 논의한 추경안 핵심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대해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차등 지급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사태 수습에 나선 셈이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공적 영역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플러스 α(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 약속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최소한 6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키 포인트는 차등 지급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600만원을 모두에게 다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밝힌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에 개별 업체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침이 윤 대통령의 ‘600만원 일괄지급’ 공약 파기 논란으로 이어진 점을 수습하는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공연전시·항공운수업 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실보상 보정률 100% 상향(현행 90%) 및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 확대(현행 50만원) 등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 같은 당 요청에 동의했다.

당정 협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전세 및 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도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는 교육부·일선 교육청 협의에 따라 2차 추경에 반영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물가인상으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 대해 당과 정부는 75만~100만원(4인 가구 기준) 수준의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농어가에 대한 최근비료·사료 가격 상승분 일부 국고지원 및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도 국민의힘이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당정 협의 이후인 12일 33조원+α 규모의 추경안 발표할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경험하라

BJFEZ INFRA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에 위치합니다!

항만·물동량 세계 6위 부산항 신항과 공항·철도로 이어지는 복합물류체계의 최적지

풍부한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8백만명에 달하는 인근 지역 소비자 시장과 노동인구 중 97%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풍부한 인력 제공

기업하기 좋은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조세감면·저렴한 임대료·뛰어난 정주환경 및 각종 행정 편의 제공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BIFEZ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대표번호 : 051) 979-5000